

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그 너머의 상상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2019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럼으로써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민주화운동으로 확립되었다. 이제 국가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항쟁을 기념함으로써 그 역사에 담긴 정치적 진실들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화는 사건의 진실 찾기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쟁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마민주항쟁의 사건과 주체들은 국가적 기념일의 형식 속에서 단일의 정치적 의미와 존재로 규정되는 것 이상의 의미와 존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다양체 또는 개별자로 부르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일관되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사유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근대가 확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의 문을 열 수 있다.

주제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민주주의, 정치적 동일성, 다양성

* 이 논문은 2020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BUMAF-2020-03).

I.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이 되다

2019년 9월 17일, 국무회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정부의 의결 이후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도 활발하게 움직여 각각 2019년 12월 26일과 2020년 1월 1일,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두 조례에서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부산광역시의회 조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경상남도의회 조례)으로 규정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정과 조례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라는 공식적 해석을 부여받으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잇는 국가 기념일로 재탄생했다. 항쟁을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했던 오랜 노력이 항쟁 발발 40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정부 법령으로 공식적인 역사적·정치적 정통성의 자격을 얻기까지 오랜 망각과 논쟁과 기억투쟁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부마민주항쟁은 그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유신체제의 갑작스런 붕괴와 이후에 일어난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주된 정치적 이슈 영역 바깥으로 밀려났고, 그 항쟁의 역사적·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와 대립으로 인해 합의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¹⁾ 부마민주항쟁이 이 같은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한국 민주화운동의 공식 역사로 자리 매김 되었다는 것은 중

1) 홍순권,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제27집, 2011 참조.

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 국가적 규정을 따라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기념식이 열렸다. 40주년 기념식은 마산의 경남대학교에서, 41주년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독재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²⁾고 연설했다. 그리고 41주년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신철폐, 독재타도! 부마민주항쟁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열린 역사적 날입니다”, “그 순수한 시민들의 정의로운 씨앗이 1980년 광주 땅에 아프게 흩뿌려지고, 1987년 6·10 항쟁에서 뜨겁게 망을 땀히더니 2017년 마침내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꽃으로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라고 말했다.³⁾

이처럼 40년 만에 부마민주항쟁은, 많은 사람들의 소망대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국가의 공식적 기억 안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주기적인 기념의 대상이 될 자격과 권리를 획득하는 것처럼, 부마민주항쟁 또한 민주주의 이름으로 기념되었고 그 기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항쟁은 직접적으로는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시민적 저항으로, 궁극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의지의 연속으로 호명되고 신성화되었다. 항쟁에 대한 그와 같은 기념의 형식과 내용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소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근대국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이념 중 하나이고, 그 명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⁴⁾

다른 민주화운동처럼 10·16 부마민주항쟁 또한 국가에 의해 주기적으로 기념된다. 두 번의 기념연설이 말해주고 있듯이, 국가라는 정치적 주체는 부마민주항쟁을 한국 현대사와 정치사라는 거대한 시공간성 속에서 의미화 한다. 항

2) 김용훈,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첫 국가기념일 행사 마산 경남대에서 개최.” 『가야일보』 2019년 10월 16일.

3) 정세균,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년 10월 16일.

4) 하상복, 『권력의 탄생: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세창출판사, 2019, pp. 140-149.

쟁은 장기적 독재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향한 투쟁이었고,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언어를 실질화하기 위한 중대한 운동이었다. 국가가 항쟁을 거대한 정치적 담론과 서사 속에서 해석하고 규정함에 따라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독재에 맞서 싸운 그리하여 한국 현대사와 정치사의 물줄기를 바꾼 애국의 존재로 의미화 된다. 그렇게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성 안으로 들어와 단일의 주체로 표상된다. 근대국가라는 정치체는 구성원들을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따라 분류해야 할 운명인데, 그 속에서 그들은 모두 이념적 동질성에 따라 집합적 단위로 묶이고 공적인 존재로 호명되어야 한다.⁵⁾ 국가의 이름으로 열리고 구축되는 기념의례는 정치적 집단성에 기초한 애국적 표상화의 논리가 운동하는 자리다.

국가적 기념일의 제도적 시간으로 들어온 부마민주항쟁의 참여자들과 희생자들은 공히 한국 민주주의 역사라는 거대 서사의 직조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가가 기념일의 형식을 통해 항쟁의 주체들을 자신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안으로 포괄하는 것, 즉 그들을 민주주의를 위한 애국적 존재라는 집합 주체로 통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국가적 이념을 위한 희생적 주체임과 동시에 자기 고유의 삶의 열정을 지닌 개별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가와 정치는 민주주의를 향한 집단적 주체의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기념함으로써 그들의 의지와 열정을 표출한다. 그렇지만 개별자들을 국가적 이념을 수호하는 집합적 주체로 통합해버리는 공식적 기억과 기념제도 속에서는 그 주체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에 연결된 또 다른 진실을 만날 수 없다. 그 개별자들의 다양한 존재성에 눈을 돌리는 것은 국가와 정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쟁이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적 기념일이라는 제도적 형식과 공식적 언어가 항쟁 과정에 담겨있던 모든 이야기

5) 하상복, “문학의 정치성과 새로운 주체의 상상: 파리퐁뮌과 빅트로 위고, 제주 43과 현기영의 경우.” 『NGO 연구』 제15권 2호, p. 206.

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러한 문제제기는 국가적 기념일로서 부마민주항쟁의 무용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적 서사 속의 민주주의로는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하며 특수한 삶과 고민의 양태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 위에서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의 본질인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근대국가의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따라 신성한 이념으로 정립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기념의 배경적 논의를 진행하고, 제3장은 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부마민주항쟁을 의미부여하는 이념적 논리를 고찰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적 근대성을 논의하며, 제4장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새롭게 논의하기 위한 정치학적, 철학적 지평열기를 시도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고민하고자 한다.

II. 근대국가와 민주주의 신성화 - 역사적 연원

사회철학자 만하임(Karl Mannheim)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근대정치의 본질을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모든 시대의 그 어떤 당파의 경우에도 인간의 사유란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총체적 이데올로기 개념에서의 보편적 파악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강조는 원문)”고 이야기하고 있다.⁶⁾ 그에게서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현실과 무관한 관념의 형식이라든가 정치적 사실을 은폐하는 허위의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만하임은 이데올로기를 그와 같은 부정적이고 예외적인 특성과 구분하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특정한 정치적 해석틀의 의미에서 모든 정치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조건으로 이해하려 한

6) 칼 만하임, 임석진 옮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김영사, 2012, p. 199.

다. 그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총체적 이데올로기’ 개념이 그것을 지칭한다.

전근대 정치공동체가 특정한 인격적 존재의 형상으로 가사화된다면 근대의 정치공동체는 그 이데올로기 형식으로 구현된다. 스미스(A. D. Smith)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국가는 민족국가(nation-state)라는 정치적 원리를 본질로 하는데⁷⁾, 여기서 국가의 주권적 실체로서 민족은 황제 또는 왕과 같은 인격체가 아니다. 오히려 민족은 ‘근대 이데올로기를 체현하고 있는 정치적 의지의 개념적 집합체’라고 말해야 한다.⁸⁾ 전근대적 인격국가에 대한 안티테제로 탄생한 근대국가는 인권, 존엄, 자유, 평등, 계약과 같은 이념 위에 스스로를 정립하고, 그러한 이념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을 민족으로 명명했다. 근대국가는 민족이라는 주체의 집합적 소유로 나타난다. 영국의 정치가 샤프츠베리(Shaftesbury)가 이야기하고 있는, 컨트리(country)와 대별되는 이념의 공유체로서 파트리아(patria)가 바로 민족국가다.⁹⁾

영국의 정치학자 던(John Dunn)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근대적 파트리아가 보편적으로 열망하는 이념으로서 민주주의를 만난다.

가는 곳마다 그것은 권위를 요구하고 존중을 요청한다. [...] 사실상 그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가장 잔혹한 독재체제하에서조차 그것을 요구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다. 또 그런 요구가 그야말로 흥포한 억압에 의해 공적 담화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되어 아예 영원히 들리지 않게 된 지역도 이제는 거의 없다.¹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민주주의다. 프랑스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급진 민주주의 실험 이래 “정부형태가 아니라 강렬하고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거

7) Smith, A. D., “State-Making and Nation-Building.” A. Hall, Judith, ed., *States in History*, Oxford: Blackwell, 1986, p. 228.

8)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프랑스, 미국, 한국 독립모지의 탄생과 진화』, 전주: 모티브북, 2014, p. 52.

9) Shaftesbury, *Characteristic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Klein, Lawrence, F.,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399-402.

10) 존 던, 강철웅·문지영 옮김,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서울: 후마니타스, 2015, p. 33.

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의 극치이자 권력의 근원으로”¹¹⁾ 등장했다는 그의 주장에 걸맞게 오늘날 민주주의는 예외 없이 모든 정치공동체가 준수하고 지켜 내야 할 원리와 절차와 당위적 목표가 되었고, 모든 정치권력의 — 던의 표현을 빌자면 ‘가장 잔혹한 독재체제’를 포함해 — 존재근거와 정당성의 원천이 되었고, 그리하여 가장 신성한 국가적-공동체적 기념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왜 그토록 강력한 매력을 지닌 성스러운 이념이 되었을까. 이 문제에 답하려면 정치적 근대 탄생에 대한 역사적 추적이 필요하다.

정치적 근대는 서유럽에서 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 혁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곧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치체제의 수립을 의미한다. 전근대 정치체제는 왕과 같은 특정한 자연인에 주권성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주권성은 권력자를 표상하는 상징화로 구현되었다.¹²⁾ 정치적 근대는 인격이 아니라 이념에 연결된 주권성으로 이행했고, 그 주권성은 이념의 재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자유와 해방의 근대이념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인 민족은 전통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모든 권위와 지배를 무너뜨리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원리와 가치 위에 정치적 유토피아를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진보적 주체, 민주주의 주체였다. 그렇게 보면, 혁명 주체인 민족에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불가분의 가치로 통합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민족국가의 정치적 본질이 민주주의임을 말해 준다.

홉스봄(Eric Hobsbawm)이 말하는 것처럼, 유럽의 근대는 자본의 시간이었다.¹³⁾ 근대 유럽은 자본주의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의 혜택을 받았지만, 계급 대립과 노동 착취와 그로 인한 반인권적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다. 유럽의 근대를 만든 이념인 민주주의는 그러한 사회경제적 모순과 부조리를 비난하고 개혁하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근대국가의 원리로서 민주주의는 보편적 언어 형식으로 주창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으로서는 노동자

11) 던, 위의 책, p. 215.

12) 송혜영, “나폴레옹(1769-1821)의 선전초상화.”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17집, 2002, p. 140.

13) 에릭 홉스봄, 김동택 옮김, 『자본의 시대』, 서울: 한길사, 1998.

계급의 부자유와 불평등과 반인권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우선적으로 선거권 확대를 통해 확장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질적 평등의 사회를 향한 급진적 의지와 열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반인권과 부자유와 불평등이 초래되던 19세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유럽의 근대가 특정 계급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이념적 추동력이었다.

한편, 민주주의 이념의 의지적 공동체로 태어난 민족은 19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중대한 의미와 위상 변화를 겪는다. 그 기점이란 ‘나폴레옹의 등장과 정복전쟁’이다.¹⁴⁾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나폴레옹 제국의 패권주의가 전개되면서 자신의 원초적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프랑스 제국의 정복전쟁은 이웃 국가들의 적대감과 그로 인한 정치적 통합열망을 만들어냈다. 나폴레옹 군사적 패권의 가장 큰 희생을 당했던 프로이센이 대표적 모델이다. 1807년 겨울, 프로이센의 철학교수 피히테는 베를린 아카데미에서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란 연설을 했다. 14회에 걸친 연설의 결론에서 그는 정치적 통합의 열의와 그것을 위한 새로운 민족 원리를 제시했다. 민족은 “모든 지역에서 독일어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로 호명되었는데, 그에게서 민족은 “발성 기관에 미치는 동일한 외적 영향 밑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를 발달시키는 사람들”¹⁵⁾이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집합인 민족은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을 통해 탄생한 민족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피히테의 민족원리는 1860년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구현되었고, 1870년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국수주의적 양상으로 드러났다. 그 점에서 통일독일과 보불전쟁은 유럽 민족주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민족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혈연과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만의 닫힌 사회

14) Kramnick, I. and Watkins, F. M., *The Age of Ideology Political Thought, 1750 to the Pres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9.

15) J. G. 피히테, 황문수 옮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서울: 범우사, 1997, pp. 64, 229.

를 향한 정치적 열망으로 퇴행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반(反) 민주주의적 민족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대결로 몰고 들어간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적나라하고 극단적인 양태로 발현되었다.

유럽의 정치적 근대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이 교착하는 자리 위에 새로운 국가와 정치공동체를 수립하려는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하지만 제국주의는 그 정치적 기획의 본래적 지향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특정 정치체제 속에 갇힌 민족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승리주의 경쟁에 몰두했다. 19세기 말 드레퓌스 스캔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진보적이고 보편주의적인 민족의 결합체로서 혁명 프랑스는 반유대주의의 폐쇄적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인권과 진실이 철저히 유린되고 무시되는 반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갔으며¹⁶⁾, 자유와 해방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이상향으로 선포된 신흥국 미국은, 19세기 말 ‘메인호 폭발사건’이 보여주듯이, 국가적 팽창을 위한 맹목적 민족주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¹⁷⁾ 유럽과 서구의 근대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식민지 경영이 초래할 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제국주의를 욕망했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폭력의 광풍에 맞설 도덕적 준거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반전, 평화, 보편적 인권, 시민권과 같은 이념과 가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퇴행적 상황을 비판하고 바꾸어내고자 했다. 프랑스의 반유대주의와 국수주의적 군사주의에 대해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외쳤고, 유럽이 민족적 대결과 식민지배로 치달으려 할 때 민주주의는 전쟁 반대와 민족 자결을 요구했다. 유럽 근대에서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함께 탄생해, 민족주의가 폭력과 지배의 힘으로 변질되어 갈 때 그 역행 운동을 막아내는 중대한 이념적 방어막이었다. 그와 같은 역사적 연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이념보다, 민주주의가 예외 없는 정치적

16) 에밀 졸라, 박명숙 옮김, 『에밀 졸라: 진진하는 진실』, 서울: 은행나무, 2014.

17) Gould, Lewis I., *The Spanish-American War and President McKinley*,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2, p. 22.

신성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인식한다.

근대의 정치적 운동 속에서 민주주의가 신성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근대국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신성화의 이념으로 정립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배경이자, 부마민주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는지를 인식하기 위한 논리적 고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민주주의가 보편성의 차원과 특수성의 차원에 교차하는 방식으로 신성화된다는 점이다.

Ⅲ. 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 역사적 평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른바 ‘비서구국가들’은 근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해나갔다. 그것은 유럽에서처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기획은 쉽게 달성되지 못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근대 민족국가도 수립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국가를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권위주의 독재에 의한 반민주주의로 귀결 되곤 했기 때문이다.¹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자본의 패권과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저항 이념이었던 것처럼, 비서구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지배를 벗어나 소망스런 사회와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이념적 동력이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통치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성스러운 이념적 준거였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민간 그리고 군부 권위주의의 오랜 지배 속에서 근대국가 한국은 민주주의 실현을 궁극적인 정치적 과제로 설정해왔다. 제1공화국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된 권위주의 통치는,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의 짧은 지배를 제외하고, 적어도 1987년 6월의 민주화 이행 이전까지 그 억압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승만에서 박

18) O'Donnell, G., Schmitter, P., Whitehead, L., 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 (Vol. 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정희를 거쳐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지배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름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일련의 가치들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훼손해왔다.

이러한 정치사적 맥락은 권위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역사적 운동들, 그러니까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이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사건으로 해석되고, 공동체적 기념의 대상으로 탄생하게 된 이유를 말해준다. 그리하여 각각의 민주항쟁과 운동은 자신의 고유하고 특별한 위상과 의의를 부여받아 기념되어 오고 있는데, 부마민주항쟁은 그러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의 맨 마지막을 차지했다.

그와 같은 이유는 부마민주항쟁이 한국 현대사의 다른 민주화 투쟁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커다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테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1979년 10월의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형성의 역사에서 결코 간과되거나 주변화 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항쟁이 무너뜨리고자했던 체제로서 ‘유신’에 대한 해석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체적인 차원에서 유신은 “헌법부터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반민주적 정치체제”¹⁹⁾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해 다른 평가를 보면, 유신체제는 “제도적으로 의회공간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대통령 1인 독재체제와 종신 대통령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전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 본질에서 “개발동원체제를 파시즘적으로 재편한 것이다.”²⁰⁾

이 평가들에 비추어보면 박정희의 유신 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를 이루는 모든 헌법적, 법률적 요소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린 정치적 공간 위에서 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대단히 예외적이고 기형적인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유신체제의 이러한 반민주주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대통령 일인 지배의 제도화’를 완성했다. 말하자면 “박정희 1인에게

19) 전재호, 『박정희 대 박정희』, 서울: 이매진, 2018, p. 129.

20)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2007, p. 145.

모든 권력을 통합하고, 그와 같은 권력의 재생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그 시한에 있어서 박정희의 집권을 영구화할 수 있는 체제였다.”²¹⁾ 둘째, 권력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반대도 인정하지 않는, 철저히 폐쇄된 체제였다. 그 점에서 가장 극단화된 권위주의 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 긴급조치권이 상징하듯이 유신헌법에 대한 시민적 비판을 포함해 권력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반대를 봉쇄했다. 셋째, 국가적 목표를 향한 전체주의적 국민 동원과 배제의 체제였다. 유신정권은 민족중흥의 기치 아래 광범위한 국가적 개입을 통한,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본질로 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해나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부문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배제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적 목표를 위한 상시적 동원 대상이 되어야 했다.²²⁾

이처럼 유신은 권력구조 차원으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1인에 의한 절대 권력의 소유 위에서 통제와 억압과 동원이 광범위하고도 촘촘하게 작동했던 시대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홍성태는 유신체제, 나아가 박정희 체제를 “폭압적 근대화”,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화를 폭력을 통해 억압하는 체제”로 규정했다.²³⁾

유신체제는 그와 같은 반 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 비판과 저항은 유신헌법 선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단히 거센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움직임의 주체들을 크게 제도권 정치-재야세력, 노동세력, 학생세력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²⁴⁾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재야세력과의 연대 위에서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결성해 개헌운동을 시작했고, 1975년 정부가 실시한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에 맞서 국민투표 거부운동을 전개했다.²⁵⁾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가속화하면서 인금인상투쟁과 노사분규에 대한 물리적 제압을 포함, 노동부문의 배제와 통제가 확대되었는

21) 전인권, 『박정희 평전』, 서울: 이학사, 2006, p. 284.

22) 전재호, 『박정희 대 박정희』, pp. 90-128.

23) 홍성태, “폭압적 근대화와 위험사회.”,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서울: 창비, 2003, p. 316.

24) 전인권, 『박정희 평전』, pp. 303-309.

25) 전인권, 위의 책, p. 304.

데, 그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반정부운동도 강력하게 일어났다.²⁶⁾ 학생들 또한 개헌청원운동에의 참여를 필두로, 유신체제의 긴급조치가 초래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 부정 앞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실천해나갔다.

제도권과 시민세력의 그와 같은 광범위한 투쟁에 맞서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제도적, 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에 맞서 반정부 세력도 저항의 수위를 높여갔다. 결국 정치적 상황은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으로 나아갔다. 부마민주항쟁은 그와 같은 대립의 상황이 유신정권의 붕괴로 귀결되는 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부마항쟁의 다음과 같은 묘사는 정부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적 불안과 정당성의 위기를 감지하게 한다.

김영삼 제명 사건이 발생한 3일 뒤인 10월 16일, 7만여 명의 부산 시민이 시청 앞과 광복동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부마항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정부는 18일 부산 일대에 계엄을 선포했다. 18일 밤부터는 마산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는 20일에 마산, 창원에도 위수령을 발동시켰다. 부마항쟁은 이전의 시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학생뿐만 아니라 도시 하층민과 도시 자영업자들과 같이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계급, 계층이 합류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서 11개소에 불을 지르고 경찰 차량 10여 대를 파괴하는 등, 당시로는 상당히 전투적인 방식으로 시위가 펼쳐졌다.²⁷⁾

그로부터 10일 뒤 박정희 암살이 발생했고, 유신체제의 급속한 붕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부마민주항쟁과 유신체제의 붕괴를 직접적 인과관계로 묶어낼 수 있어 보인다.²⁸⁾ 해방 이후 가장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권위주의 통치를 행사한 유신체제의 해체로 한국사회는 이른바 ‘민주화

26)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 162.

27)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 210.

28) 김경호,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미.”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2000, p. 2; 조정관,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009, p. 78.

의 봄'으로 불리는 정치적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한국 민주주의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한 역사적, 정치사적 맥락 위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의의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되고 평가된다.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장벽이었던 유신체제의 의미 속에서 항쟁을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4·19 혁명으로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항쟁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근대국가 수립 이후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통치의 장기 지속을 경험해왔고, 그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수립을 근대화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해야 했다. 4·19혁명은 그와 같은 민주주의 기획의 전국적 의제화를 설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미완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실천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 짧은 정치적 희망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반민주주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했다. 5·16 군사쿠데타에서 그와 같은 정치적 퇴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신체제는 정치적 근대의 보편적 원리이자 한국 근대화의 핵심 원리인 민주주의를 그 근원에서부터 부정하려 했던 극단의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만이 아니라, “공포정치의 제도화”²⁹⁾라는 개념이 말해주듯이, 일상적 감시와 폭력의 그물망으로 시민의 공적·사적 삶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민주주의의 일상적 토대를 무너뜨린 체제였다.

그와 같은 해석적 관점에 선다면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의 특별한 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부마민주항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부정으로서의 유신체제에 대한 최초의 전면적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정치적 근대화 의지를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해온 극단적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실천적 반정립이었다.³⁰⁾

29) 차성환, “유신체제와 부마항쟁: 지배와 저항의 사회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23호, 2012, p. 45.

다음으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 속에서 해석되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개관한 부산의 민주공원이 “한국 근현대사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 온 4·19 민주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및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항쟁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³¹⁾ 설립되었다는 관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부마민주항쟁의 이름에서 그 ‘민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형성사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항쟁은 민주주의의 문을 연 4·19 정신을 계승하고 있고, 민주주의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가능하게 한 중대한 계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엮은 『한국민주화운동사2』에서 부마민주항쟁은 “4월 혁명에서 시작된 민주화를 향한 대중적 열기의 전통을 다시금 복원시켜 1980년대의 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해준”³²⁾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부산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가 엮은 『부산민주화운동사』도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항쟁은 “학생운동이나 소수 명망가에게 국한되어 있던 70년대의 그 어떤 반독재 민주화운동보다도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그로써 담보상태에 처해 있던 70년대 학생 및 재야 중심 민주화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80년대 광주항쟁과 6월항쟁이라는 대규모 반독재 민주항쟁의 도래를 예고하고 향도하였던 것이다.”³³⁾ 차성환의 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차성환은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사를 이룬바 ‘4·19의 길’과 ‘5·16의 길’이라는 두 개의 원리 속에서 파악한다. 그가 말하는 ‘4·19의 길’이 민주주의 형성을 향한 근대화의 도정이 라면, ‘5·16의 길’은 물질적 성장을 통한 근대화의 과정이다. 5·16의 길의 성격은 유신체제에 이르러 그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에 따르면 극단적인 억압적 체제로서 유신권력은 4·19의 길이 추구하고자 했던 중대한 공적 정신을 억누르고 망각을 강요했지만 그에 대한 저항으로 부산과 마산의 대학생과 민중들

30) 홍순권,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p. 1.

31) “민주공원 소개.” 『민주공원』.

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2』, 서울: 돌베개, 2009, p. 354.

33) 부산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부산민주화운동사』, 부산: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8, p. 429.

은 4·19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표출했다.³⁴⁾

IV.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 정치적 동일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이념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지평은 정치적 근대의 본질적 특성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너머를 상상하기 위해 정치적 근대의 특성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상상의 공동체』에서 민족의 개념을 통해 근대 정치공동체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그에게서 민족은 “상상된 것이다”(강조는 원문).³⁵⁾ ‘상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근대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민족이 신체적 매개 없는 존재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동료 간의 심리적 동질성과 결속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소속감과 동일성의 기반 위에서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근대가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에 강렬한 열정을 드러내는 이유를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신체를 공유하지 않는 민족적 구성원들의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힘으로서 상상은, 앤더슨이 말하는 것처럼, 의례의 운동으로 실천된다. 그가 예로 드는 민족적 의례는 신문읽기,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국가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³⁶⁾ 그 점에서 신문은 일종의 상징이고, 그 상징이 운동하는 과

34) 차성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4·19의 길’과 ‘5·16의 길’ 사이에서.” 『향도부산』 40호, 2020, p. 59.

35) 베네딕트 앤더슨, 윤흥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2, p. 25.

36) 앤더슨, 위의 책, p. 61.

정이므로 의례다.

민족적 동질성 형성의 의례에 대한 정치적 근대의 기원적 열망을 우리는 프랑스혁명에서 만난다. 혁명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축제 ‘연맹제’(Fédération)가 그것이다. 연맹제는 혁명의 대의와 이념을 가시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파리를 비롯해 전국에서 개최된 정치의식이었다.³⁷⁾ 프랑스혁명에서 발명된 근대적 정치의례는 오늘날 모든 근대국가들이 실천하고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과정이다.³⁸⁾

뒤르켐의 종교사회학적 통찰은 그와 같은 정치적 의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공동체가 통합과 질서를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체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뒤르켐은 공동체를 표상하는 신성한 상징물인 토템과 그 토템을 공유하는 의례의 중대성을 말하고 있다. 근대국가들이 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정치의례 또한 그와 같은 인류학적 코드로 독해할 수 있는데,³⁹⁾ 그와 같은 근대적 토템의 하나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앞서 관찰했다. 근대정치는 민주주의를 신성화하고,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을 체화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정치적 근대는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의례를 주기적으로 거행한다. 신성한 존재는 순환적 시간의 고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⁴⁰⁾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기념 의례를 구성하는 정치적 원리를 생각한다. 홍태영의 사유에 기대면, 근대는 본질적으로 “동일성의 정치”⁴¹⁾에 놓여 있다. 그가 말하는 동일성이란 근대정치가 개별적 다수로서의 인민을 하나의 대표를 통해 표상하고 의지로 전환해낸다는 의미에서다.⁴²⁾ 동일한 정치적 의지를 지닌 단일한 정치적 주체에의 열망이 근대성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정치적 시공간의 관념 속에서 근대의 동일성을 살펴볼 수 있다. 푸코

37) 윤선자, “1790년 프랑스 연맹제: 국민적 통합의 축제.” 『서양사학연구』 제7집, 2002, p. 48.

38)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2004.

39) 에밀 뒤르켐, 노치준·민혜숙 옮김,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p. 306.

40)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한길사, 1998, p. 103.

41) 홍태영, 『국민국가를 넘어서』, 서울: 진인진, 2019, p. 49.

42) 홍태영, 위의 책, pp. 49-50.

의 ‘에피스테메’ 개념을 따른다면⁴³⁾, 근대 또한 정치적 인식을 구조화하는 특정한 에피스테메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이념이라는 균일한 공간 속에서 진보로 나아가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운동 관념이다. 근대는 이념으로 환원되는 공간의 동일성, 역사로 치환되는 시간의 동일성 위에 축조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시공간적 동일성과 선형성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신성한 토tem이 가시화된다. 정치적 근대는 공동체가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시공간 속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최종적 목표로 민주주의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근대 공동체의 정치적 시공간은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보편 운동, 즉 ‘민주화’로 환원된다.⁴⁴⁾ 여기서 정치는 민주주의 형성의 역사를 궁극의 지향으로 삼는 단일의 시공간 위에서 동일한 집합적, 공적 주체들의 무대로 규정된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집단들의 거대한 투쟁의 과정인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홍태영은 “결코 동일화될 수 없는 것들을 ‘잔보’라는 이름 혹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동일화하고자 했던 것이 근대의 동일성의 정치였다”⁴⁵⁾라고 말한다.

근대국가 한국의 정치적 시공간과 주체 또한 그와 같은 동일성 원리 안에 놓여 있다. 한국의 정치적 근대성 또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들의 과정으로 해석되곤 한다. 가령, 1919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한국의 정치적 시공간을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로 정리하려는 의도에서⁴⁶⁾ 우리는 그러한 관점의 사례를 만난다. 그 차원에서 근대국가 한국은 민주화를 향한 집단적 노력의 역사와 그 역사에 참여했던 이들을 국가적 차원의 의례 형식으로 기념하지 않을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화를 우리는 그러한 해석적 지평 위에 놓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9년의 항쟁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적 시간 속에

43)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2012.

44) 정치학자 헌팅턴이 그와 같은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Huntington, S. P., *The 3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45) 홍태영, 『국민국가를 넘어서』, p. 59.

4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서울: 한울, 2019.

서 민주주의 형성의 중대한 계기로 국가에 의해 기념 되고 있다. 두 차례 기념 행사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발언이 말해주듯이 항쟁은 반독재, 반권위주의 민주화 이념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그 역사적 시간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숭고한 국가적·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애국적 존재로 신성화된다.

이처럼 부마민주항쟁을 한국 민주주의 형성의 역사적 운동 속에 위치시키고 항쟁 참여자들을 민주화의 희생적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일은 적어도 항쟁을 국가적 기념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었고 염원이었다. 이제 부마민주항쟁은 정치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의미를 만들고 공유하는 일로서 기념⁴⁷⁾의 대상이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우리는 만난다.

하지만 국가라는 공식적 주체가 기념일의 형식으로 표상하고 재현하는 진실이 항쟁의 모든 진실일 수는 없다. 국가는 자신의 단일한 정치적 인식 틀 속에서 항쟁과 그 주체들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정치적 동일화의 논리 속에서 사건과 주체들은 단 하나의 해석적 구성물로 환원될 운명이다. 본질적으로 정치적 대의의 장소인 국가적 기념일은 기념해야 할 사건을 단일의 이념으로, 그리고 주체들을 그 이념을 공유하는 균질한 집합적 존재로 의미화하고 성화한다. 그러한 동일화의 구조는 사건과 주체의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 운동, 이야기의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봉쇄해버린다.

해방 이후 3·1운동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과정에 대한 이민영의 연구는 우리의 논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저자는 3·1운동에 대한 공식적 기념의 형식이 드러내지 못하는, 운동에 대한 다양하고 개별적인 기억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건이 종결된 지점에서 시작되는 기념식은 과거의 의미를 안정화하고 기억을 역사로 변모시키지만”, “기념되지 못하는 기억”, 즉 기념식의 형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층적이고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기억이 잠재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데 있다.⁴⁸⁾ 이러한 문제의식은 궁극적

47) Garcia, P., “Exercices de Mémoire? Les Pratiques Commémoratives dans la France Contemporaine.” *Cahiers français: la mémoire entre histoire et politique*, n° 303, 2001.

48) 이민영, “기념되는 역사와 부유한 기억들 - 3·1운동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8집, 2019, p. 83.

으로 3·1운동의 주체를 민족해방을 위한 단일한 존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기념되지 못하는 기억으로 재등장하는 3·1운동의 과거에서 독립운동의 주체들은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정만을 지닌 순수한 주체들이 아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고 불가능한 승리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주장하는 개인들로 등장한다. [...] 따라서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을 했던 주체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수렴될 수 없다.⁴⁹⁾

이 관점을 부마민주항쟁으로 옮겨 놓을 때, 김원의 두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을 비판하고 새로운 접근의 당위와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는 “부마항쟁도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사의 일부로 취급되거나, 도시 봉기의 주체인 도시하층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 김영삼 제명 이후 나타난 지역주의적 성격, 한미갈등, 정치사회 내 균열 등 전체적인 민주화운동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져왔다”⁵⁰⁾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관점이 가져오는 문제들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적 이념과 시공간의 틀 속으로 환원되어 그들이 부산과 마산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했던 유신체제에 대한 고유의 고민과 고통,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유신체제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과 실천을 감지하고 인식할 수 없다는 데 있다.⁵¹⁾ 그들은 민주화운동의 하위 주체 또는 세력의 일원으로 묶이면서 모두 역사적 과제를 향해 나아간 단일의 집합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원은 그들을 향해 “총체성”이라는 이름에 맞서 “개별성”⁵²⁾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자 한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다양체’ 개념을 사유하고 있다. 다양체는 하나

49) 이민영, 위의 논문, pp. 83-84.

50) 김원,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정신문화연구』 제29권 2호, 2006, p. 420; “1979년 가을, 부마를 뒤덮은 유령들.”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서울: 현실문화, 2011, p. 415.

51) 김원, “1979년 가을, 부마를 뒤덮은 유령들.”, p. 417.

52) 김원, 위의 책, pp. 446-447.

의 고정되고 확립된 정체성으로 채워진 존재가 아님을 뜻한다. 그것은 생명을 반복하면서 끝없이 스스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다양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성의 차원만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양상을 생산해 낼 잠재성의 차원을 상상해야 한다. 다양체는 현실적인 존재이면서 잠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 다양체의 운동은 거대한 규칙 속에서 질서 잡힌 운동일 수 없다.⁵³⁾

이러한 사유에 비추어보자면, 부마민주항쟁의 참여자들은 국가적 의지에 의해 민주화운동의 집합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체다. 그들을 국가적 기념일의 공식적 형식만으로 이해한다면 그들 삶의 총체적 진실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민주화운동의 차원에서 항쟁을 해석하고, 국가적 기념일의 형식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그들 삶의 공적이고 정치적인 얼굴에 주목하는 것이고, 국가성과 공공성에 의해 확정될 민주주의적 영웅성의 차원에서 그들의 존재성을 재현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이 기념일을 매개로 자신의 정치적 진실을 드러낼 공식적 계기를 확보한 현재적 시점에서, 국가가 규정하고 확정한 진실 너머 또 하나의 진실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양체로서 혹은 개별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들의 사적이고 개별적인 삶에 연결된 또 하나의 진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진실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을 말하자면, 다양체로서 개별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김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뷰와 구술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다.⁵⁴⁾ 부마민주항쟁의 진실 찾기가 공식적 텍스트를 넘어 그들에 대한 개별적 기억을 증언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⁵⁵⁾ 그것은 국가적 기념일이 만들어낼 공식적 기억과,

53) 질 들뢰즈,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2004.

54) 김원, “1979년 가을, 부마를 뒤덮은 유령들.”, p. 470.

55) 이은진, “1979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979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 부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19;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구술자료 상세목

다양체의 개별적 기억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일 텐데, 그럼으로써 국가의 공식적 기억으로 환원되지 않을 개별적 기억에 담겨 있는 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구술과 증언은 개별자의 기억을 명백하고 일관된 언어적 형식으로 발현해내야 하는 과정이다. 또한 그 기억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기서 다양체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표현되기 어려운 기억들이라도 중국에는 최소한의 논리적 형식 속에 담겨야 한다는 어려움을 만난다. 고통의 강도가 높을수록 언어적 표현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실 찾기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문학을 상상해볼 수 있다. 문학은 표현 불가능한 것, 양립 불가능한 것, 사실과 허구의 사이 모호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⁵⁶⁾ 그렇게 볼 때 민병욱의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문학사회학적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1994년에 출간된 임수생의 시집 『혁명철학』과 2003년 『부마민주항쟁 20주년 상황재현곳』, 2006년에 출간된 이규정의 소설 『멀고도 먼 길』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찾기 위한 문학적 노력을 추적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연구자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한 뒤 적어도 10년간 지역 그리고 전국의 문학 예술인들이 사건에 대한 문학적 해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문학적 시도들이 간과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부마항쟁은 [...] 단순히 기념문학의 대상이다. 기념문학은 부마항쟁 이후 그것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면서 정신을 계승하자는 행사용 문학이다”⁵⁷⁾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문학적 드러내기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록집, 1979 부마의 기억과 기록』, 부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19.

56) 전진성, 『빈딘성으로 가는 길』, 서울: 책세상, 2018.

57) 민병욱,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향도부산』 제27집, 2011, p. 130.

V. 부마민주항쟁과 민주주의 기념 - 새로운 상상을 향해

지난 2019년 부마민주항쟁은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부마민주항쟁은 민주주의 형성에 관한 한국적 역사의 공간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기념의 과정을 통해 사건의 정치적 진실들이 순차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의 국가적 기념일화는 항쟁의 역사적·정치적 진실에 한 발 짝 더 다가가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쟁의 모든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정치사회적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사건의 진실은 정치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진실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또 다른 진실, 김원이 말한 ‘유령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국가의 공식적이고 확정된 의미의 언어세계 속에서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의 사람들은 국가적이고 공적인 단일성의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삶의 곁을 지닌 다양체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문학을 포함해, 그들을 개별적 존재로 주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 -- 보다 확장하자면 한국 민주화운동 -- 의 국가적 기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문을 열어준다. 무페(Chantal Mouffe)는 정치적 근대가 직조한 민주주의가 초래하는 폭력적 상황을 인식한다. 근대 민주주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화하고 획일화한다는 것이다. 이제 “차이 — 특수한 것, 다양한 것, 이질적인 것 — 를 인정하라는 것, 다시 말해 사실상 추상적인 ‘인간’ 개념에 의해 배제되었던 모든 것을 인정하는”⁵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 시간이다.

부마항쟁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항쟁에 대한 집합기억이 정치공동체의 차원에서 확립되어가고 있는 진행형적 상태에서 지나치게 앞질러

58) 샤텔 무페, 이보경 옮김, 『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 29.

다양성과 개별성의 차원을 이야기함으로써 항쟁의 국가적 기념일화를 향한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인정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국가와 공동체가 정립한 집단적 프레임으로 환원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호,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2000.
- 김용훈,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첫 국가기념일 행사 마산 경남대에서 개최.” 『가야일보』 2019년 10월 16일, <http://www.gay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0>(검색일: 2020.10.15.).
- 김원,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 ‘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9권 2호, 2006.
- ___, “1979년 가을, 부마를 뒤덮은 유령들.”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서울: 현실문화, 2011.
-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1월 2일,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39169&gubun=ELIS>(검색일:2020.10.15.).
-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행정법무계약』 2020년 1월 3일, <https://www.busan.go.kr/public/ablatestll/1152707?curPage=12&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검색일:2020.10.15.).
-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2012.
- 민병옥,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항도부산』 제27집, 2011.
- “민주공원 소개.” 『민주공원』, <http://www.demopark.com>(검색일:2020.10.1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2』, 서울: 돌베개, 200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서울: 한울, 2019.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구술자료 상세목록집. 1979 부마의 기억과 기록』, 부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19.
- 부산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부산민주화운동사』, 부산: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8.
-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2.
- 송혜영, “나폴레옹(1769-1821)의 선전초상화.”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17집, 2002.
- 상탈 무페, 이보경 옮김, 『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마니타스, 2007.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 에릭 홉스봄, 김동택 옮김, 『자본의 시대』, 서울: 한길사, 1998.
-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2004.
- 에밀 뒤르켐, 노치준 민혜숙 옮김,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 에밀 졸라, 박명숙 옮김, 『에밀 졸라: 진진하는 진실』, 서울: 은행나무, 2014.
- 윤선자, “1790년 프랑스 연맹제: 국민적 통합의 축제.” 『서양사학연구』 제7집, 2002.

- 이민영, “기념되는 역사와 부유한 기억들 - 3·1운동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8집, 2019.
- 이은진, “1979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979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 부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19.
- 전인권, 『박정희 평전 -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관한 전기적 연구』, 서울: 이학사, 2006.
- 전재호, 『박정희 대 박정희』, 서울: 이매진, 2018.
- 전진성, 『빈딘성으로 가는 길』, 서울: 책세상, 2018.
- 조정관,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009.
-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2007.
- 정세균,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년 10월 16일. <https://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2503>(검색일:2020.11.01.).
- 존 던, 강철웅문지영 옮김,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서울: 후마니타스, 2015.
- 질 들뢰즈,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2004.
- 차성환, “유신체제와 부마항쟁 - 지배와 저항의 사회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23집, 2012.
- 차성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4·19의 길’과 ‘5·16의 길’ 사이에서.” 『향도부산』 40호, 2020.
- 카를 만하임, 임석진 옮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김영사, 2012.
- J. G., 피히테, 황문수 옮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서울: 범우사, 1997.
-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프랑스, 미국, 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 전주: 모티브북, 2014.
- 하상복, 『권력의 탄생』, 서울: 세창출판사, 2019.
- 하상복, “문학의 정치성과 새로운 주체의 상상: 파리쑤민과 빅트로 위고, 제주 4·3과 현기영의 경우.” 『NGO 연구』 제15권 2호, 2020.
- 홍성태, “폭압적 근대화와 위험사회.”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서울: 창비, 2003.
- 홍순권,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향도부산』 제27집, 2011.
- 홍태영, 『국민국가를 넘어서』, 서울: 진인진, 2019.
- Garcia, Patrick, “Exercices de Mémoire? Les Pratiques Commémoratives dans la France Contemporaine.” *Cahiers français: la mémoire entre histoire et politique*, n° 303, 2001.
- Gould, Lewis I., *The Spanish-American War and President McKinley*,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2.
- Huntington, S. P., *The 3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 Kramnick, I. and Watkins, F. M., *The Age of Ideology—Political Thought, 1750 to the Pres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9.
- O'Donnell, G. A., Schmitter, P., Whitehead, L., eds.,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Vol. 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Smith, A. D., “State-Making and Nation-Building.” A. Hall, Judith, ed., *States in History*, Oxford: Blackwell, 1986.
- Shaftesbury, *Characteristic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Klein, Lawrence. F.,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Abstract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nd Establishment of Buma Democratic Uprising as National Memorial Day – Its Historical Signification and Imagination Above it

Sangbok Ha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ersity)

In 2019, Buma democratic uprising has been established as national memorial day. By this decision, this uprising has been built as a legitimate and orthodox democratic movement in Korean democratic history. From now, the State would reveal the political truth about this movement, opening regularly and periodically the national ceremony for this memorial day. We can say that the establishment of Buma democratic uprising as a national memorial day will take a important role for finding its truths. But, we may not say that all of truth about this uprising will completely be revealed. Becaus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its participants will exist as signification and being beyond the unitary political subject that the national memorial day can defin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at they are peoples, very complex, often contradictory, sometimes incoherent. So, they can be called the diverse or the particular. It may be possible to open, in this thought, a door of imagination towards the another democracy beyond the democracy defined by the political modernity.

Keywords: Buma Democratic Uprising, National Memorial Day, Democracy, Political Identity, Diversity

투고일: 2020년 11월 20일, 심사일: 2020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5일